

현안과제연구

도내 중소기업지원시스템 효율화 방안

연구수행 : 신동호

현안과제연구
2012. 8.

도내 중소기업지원시스템 효율화 방안 연구

목 차

I. 서론	1
II. 중소기업 지원실태	2
III. 충남 중소기업 지원현황	3
IV.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실태 조사	4
V. 벤치마킹 사례검토	10
VI. 충남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효율화 방안	16

I. 서 론

■ 중소기업지원은 정부 각 부처, 지자체, 유관기관별로 다양한 지원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추진

- 2011년 현재, 17개 소관부처(廳 포함)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신용보증기금 등 다수의 유관기관이 중소기업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관련사업을 추진
- 이에 따라 지원주체별 역할 및 기능이 불명확하여 사업운용이 다소 유사·중복적일 뿐만 아니라, 이를 조정·총괄할 수 있는 기능 또한 부재하여 정책전달 또는 사업추진체계상 비효율적인 요소 상존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통한 실효성 제고 요

-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성 및 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사업의 유사·중복성과 지원주체의 분절적인 문제를 완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원사업과 지원주체를 기능적·조직적·제도적인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중앙부처간 유기적 연계성이 저하된 채로 하달된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서 지원을 위한 관리 및 실질적 운영을 저해하기 때문임
- 따라서 각종 지원사업의 운용을 체계화하고 지원주체, 지원사업간 유기적인 연계의 필요성에 따라 지원기능, 지원조직, 지원제도 등을 통합적인 체계로 재편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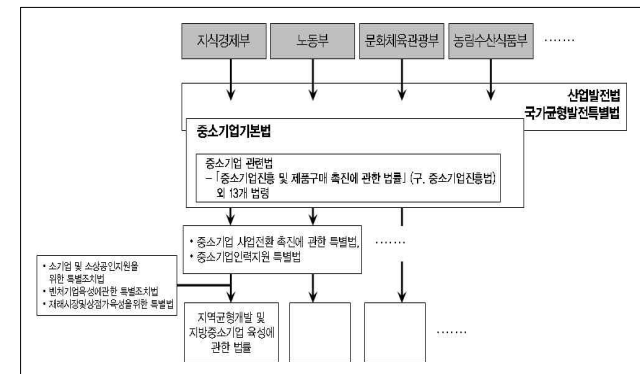
■ 수요자 중심의 정책정보 및 서비스 전달체계(delivery system) 혁신 요

- (정책 수요측면) 중소기업 지원관련 ①시책의 분산, ②정보의 분산, ③지원창구의 분산 등으로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구득하고 실제 지원받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 (정책 공급측면) 중소기업 지원기관 입장에서도 중소기업의 수가 많고, 업종 및 규모 등이 다양하여 정책정보를 개별 중소기업들에게 전달하는 데 한계를 노출
- 따라서 지역단위(area-based)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포털 구축 및 기업지원 창구를 단일화 하여 지역단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단일창구에서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음

II. 중소기업 지원실태¹⁾

1. 복잡·다기한 중소기업 지원관련 법제

- 중소기업지원의 근간인 「중소기업기본법」과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을 위시한 13개의 법령과 이들과 관련된 13개의 시행령, 그리고 8개의 시행규칙 제정
-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법 중에서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은행법」을 제외한 그 외의 법률은 모두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중앙부처-유관기관-지방정부간 위임 및 위탁업무가 난립되고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의 혼동을 초래



자료: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통합적 추진방안, 충남발전연구원(2009).

[그림2-1] 중소기업 지원 법제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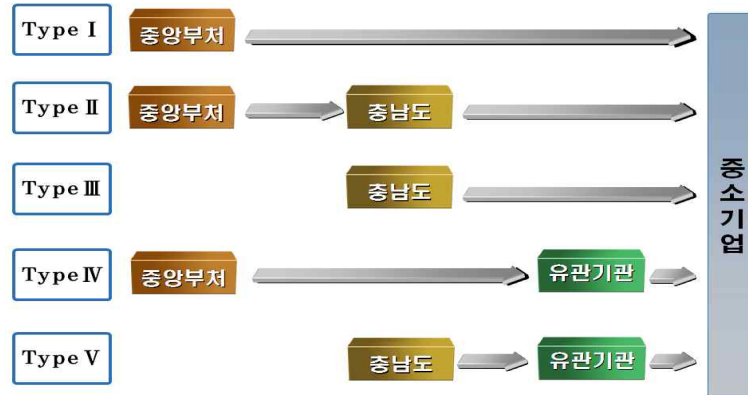
2. 지원주체 및 사업의 분절화(fragmentation)

- 현재, 중소기업 지원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다양한 지원 주체별로 융·투자, 보증·보험, 기술개발, 특허·인증, 판로·수출, 인력, 창업·벤처, 정보화·컨설팅, 자영업·유통, 대·중소상생협력 등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추진
- 구체적으로 17개 소관부처(廳 포함)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신용보증기금 등 150여개 유관기관이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관련

1) 중소기업 지원관련 정부부처, 유관기관, 충남도 사업현황을 토대로 문제점 및 개선과제 중심으로 기술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원주체별 역할 및 기능이 불명확하여 사업운용이 다소 유사·중복적인 뿐만 아니라, 이를 조정·총괄할 수 있는 기능 또한 부재하여 정책전달 또는 사업추진체계상에 비효율적인 요소가 상존



자료: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통합적 추진방안, 충남발전연구원(2009).

[그림2-2] 중소기업 지원사업 유형별 전달체계

3. 정부주도 및 공급자 중심의 지원방식

- 현행 중소기업 지원은 대부분 정부 각 부처별 주도하에 기획·집행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각 부처별 사업을 수용·시행
- 따라서 지역 고유의 산업구조와 중소기업환경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역단위에서 차별화시켜 추진하기 어려운 한계를 노정
- 관련하여 정부는 각 시도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계획수립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
- 이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으며, 이와 같은 중소기업 지원방식은 예산낭비를 포함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저해함
-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사업을 수요자 중심으

로 전환함과 동시에 각종 지원사업의 운용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4.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통합적 추진 난맥

-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사업의 유사·중복성과 지원주체의 분절적인 문제를 완화시켜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지원사업과 지원주체를 기능적·조직적·제도적인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왜냐하면 중앙부처간 유기적 연계성이 저하된 채로 하달된 지원사업은 지역단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간 상호 협력적인 사업운용을 어렵게 하기 때문임
- 따라서 지원주체 및 지원사업간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서는 지원기능, 지원조직, 지원제도 등을 통합적인 체계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모든 지원기관들이 하나의 경영구조 및 회계시스템하에서 조정·관리·운영되고, 공동재원으로 프로그램 서비스를 연계·통합하는 방식 즉, 완전한 통합(full integration)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함
-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Biz-info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나아가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체계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음

III. 충남의 중소기업지원 현황

1. 중소기업 지원유형 및 범위

- 2011년 현재, 충남도 주도의 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사업은 9개 분야에 걸쳐 총 38개 과제(사업수 기준으로 144건)로 구분되어 추진 중
- 금융, 판로/수출, 수요자중심의 지원체계, 상생기반구축, 투자/창업, 산업융지, 인력양성, 기술/특화산업, 신성장동력/전략산업 등 9개 분야에 걸쳐 총 38개과제의 자체사업 추진
 - 총 사업비는 341,143백만원임(국비 259,219백만원, 도비 24,900백만원, 시군비 39,518백만원, 기타 17,506)

[표 3-1] 충청남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

분야	과제수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금융	3	정책자금·이자차액지원, 신용보증, 펀드지원	5,820
판로/수출	6	판로, 벤처프라자, 공공구매, 해외마케팅, 수출기반 구축, 무역의 날 행사	3,065
지원체계구축	4	애로해소, 수요자 중심지원시스템구축, 유망·강소기업육성	1,378
상생기반구축	4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 소상공인지원센터운영, 동반성장문화조성	20,315
투자/창업	3	투자 및 창업보조금, 창업보육센터 운영	31,487
산업융지	5	산단조성, 브랜드네이밍, 농공단지 조성 및 회생프로그램 추진	167,949
인력	3	취업박람회, 산업인력양성, 청년 CEO 프로젝트	3,786
기술/특화산업	5	산학 공동기술, RIC운영, 특허·인증, 지역연고산업	16,562
신성장/전략산업	5	녹색·디스플레이·자동차·영상미디어·농축산바이오 산업	90,781
합 계	38	-	341,143

자료 : 2011년도 중소기업지원시책 안내, 충청남도.

- 이상의 중소기업지원시책과 더불어 충남도는 기업지원 정보 및 서비스를 11개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11개 지원분야) :
 - 기업지원정보, 기업종합지원, 경영자문/컨설팅, 기업민원, 기업애로, 수출, 투자, 산업입지, 취업/채용, 지리, 부동산 등
- (지원유형) :

- 정보제공은 기업지원, 종합지원, 수출, 투자, 산업입지, 취업/채용, 지리, 부동산 등 8개 분야
- 서비스제공은 경영자문/컨설팅, 기업민원, 기업애로, 수출 등 4개 분야

• (지원범위) :

- ① 기업지원정보 : 금융, 세제, 기술, 인력, 창업/벤처, 판로/수출, 컨설팅/특허/인증, 소상공인/전통시장, 여성/장애인/기타(유관기관 및 타지자체 지원사업 등을 총망라한 정책정보 제공)
- ② 기업종합지원 : 자금·보증, 판로·수출, 인력, 창업·벤처, 특허·인증, 기술지원, 공공구매, 조세, 기타(충남도 주관사업 정보 및 신청기관 안내)
- ③ 경영자문/컨설팅 : (경영자문)기업경영, 인사·노무, 기술·생산, 자금·재무·법률, 마케팅, 기타(컨설팅)경영전략, 재무관리, 인사·노무관리, 생산합리화, 제품개발·개선, 마케팅, 규격·인증, 지식재산권
- ④ 기업민원 : 기업활동주기(창업, 운영, 지원, 변경/폐업 및 24업종)별 민원해소
- ⑤ 기업애로 : 자금지원, 주변인프라, 판로/수출, 공장관련, 인력/교육, 기술/인증, 창업/벤처, 기타
- ⑥ 수출 : 수출관련 정보제공/자금, 인프라, 판로·수출, 공장, 인력·교육, 기술·인증, 창업·벤처
- ⑦ 투자 : 외국인단지, 국가/일반/농공단지 정보제공
- ⑧ 산업입지 : 산업단지 정보제공
- ⑨ 취업/채용 : 채용·인재, 인력양성·고용훈련 정보제공
- ⑩ 지리 : 부동산, 새주소, 생활정보, 통계정보 및 공간검색 서비스 제공
- ⑪ 부동산 : 부동산 관련 종합정보

• (지원주체) :

- 충남도 홈페이지 및 「기업SOS충남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및 서비스 제공의 실질적 지원주체는 분야별로 상이하며, 구체적으로 충남도, 중소기업청, 충남경제진흥원, 지식경제부,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국토부, 고용부, 노사발전재단, 기타 유관기관 등임

• (수혜대상) :

- 중소기업/소상공인/여성/장애인/기타 등이나, 대부분의 정보 및 서비스 수요는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짐

[표 3-2] 충청남도 기업지원 유형 및 범위

지원분야	지원유형	지원범위	지원주체	수혜대상
기업지원정보	(사업)정보	금융, 세제, 기술, 인력, 창업·벤처, 판로·수출, 컨설팅, 특허·인증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소상공인/여성/장애인/기타
기업종합지원	(사업)정보	자금·보증, 판로·수출, 인력, 창업·벤처, 특허·인증, 기술, 공공구매, 조세, 기타	각 유관기관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자문/컨설팅	서비스	(경영자문)경영, 인사·노무, 기술·생산, 자금·재무·법률, 마케팅, 기타/(컨설팅)경영전략, 재무, 인사·노무, 생산, 제품개발, 마케팅, 규격·인증, 지적권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소상공인
기업민원	서비스	기업활동 주기별 서비스 ·창업(공장설립, 행정처리) ·운영(R&D, 구매·생산, 판매, 수출입) ·지원(총무, 인사, 재정) ·변경·폐업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소상공인
기업애로	서비스	자금, 인프라, 판로·수출, 공장, 인력·교육, 기술·인증, 창업·벤처, 기타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수출	정보/서비스	(정보)수출관련 정보/(서비스)자금, 인프라, 판로·수출, 공장, 인력·교육, 기술·인증, 창업·벤처 관련 애로해소	각 유관기관	수출 중소기업
투자	정보	FEZ, 외국인단지, 국가·일반·농공단지정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내외 기업
산업입지	정보	산업단지 정보	충남도/국토부	국내외 기업
취업/채용	정보	채용·인재, 인력양성·고용훈련 정보	고용부/노사발전재단	국내기업/구직자
지리	정보	부동산, 생활, 통계, 지리정보	충남도	모든 경제주체
부동산	정보	부동산 관련 종합, 공시지가정보	충남도/국토부	모든 경제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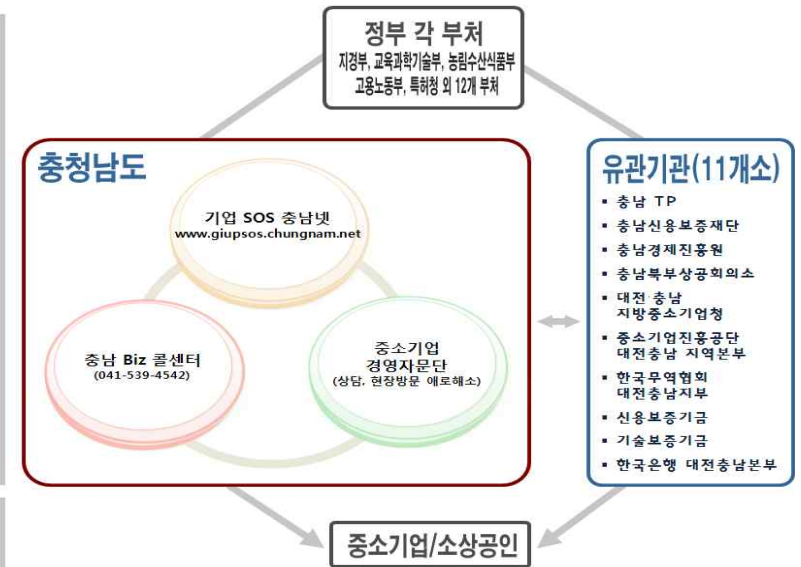
자료: 충청남도 홈페이지.

2. 중소기업 지원정보 및 서비스 제공방식

- 충남의 기업지원 정보 및 서비스는 기업SOS충남넷(giupsos.chungnam.net), 충남 Biz-콜센터, 중소기업경영자문단, 그리고 유관기관에 의해 제공됨
- 또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방식을 살펴보면, 정보는 기업지원정보, 기업종합지원, 투자, 산업입지, 취업/채용, 지리, 부동산분야로 구분되어 기업 SOS 충남넷과 그리고 이와 링크된 Biz-info 및 각 유관기관 사이트 등을 통해 on-line상에서 제공되고 있음
- 한편, 경영자문/컨설팅, 기업민원, 기업애로 관련 상담서비스는 충남경제진흥원(Biz 콜센터, 중소기업 경영자문단) 및 기업애로지원센터 등 주로 off line상에서 제공됨

공급
(정보 및 서비스)

수요
(정책수혜자)



[그림3-1] 충청남도 중소기업 지원체계

- 한편, 충청남도 내 기업지원 유관기관들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벤처, 마케팅, R&D, 인력, 경영, 장비, 기술거래, 보증, 자금, 전시·박람회, 마케팅, 컨설팅·자문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직접 주관·시행하고 있음
- 이들 유관기관의 서비스 제공방식 및 절차는 대동소이하며, 대부분 off-line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①정책수혜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해당 기관에 전화문의 또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와 신청안내를 받음 → ②사업신청에 필요한 관련 제반서류를 제출 → ③사업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 및 심사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지원 받는 프로세스를 거침
- 이상의 충청남도 및 유관기관들의 지원사업 정보 및 서비스 제공의 문제점은 지원기관 별로 분산되어 중복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지원내용이 유사한 상담 서비스를 경영자문과 컨설팅으로 이원화하여 제공함에 따라 수요자의 이용 편의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임
- 또한 기업인 니즈(needs)에 부합키 어려운 미흡한 수준의 기업투자 및 경영환경 정

보를 제공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크지 않은 실정

- 따라서 정책수요자의 혼란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지원사업의 정보공지 창구를 단일화하거나 단일의 지원분야로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내용이 유사한 서비스의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재정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업인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업투자 및 경영환경 관련정보제공이 요구됨

[표3-2] 충남도 기업지원 유형 및 범위

지원분야	지원유형	지원범위	지원주체	수혜대상
기업지원정보	(사업)정보	금융, 세제, 기술, 인력, 창업·벤처, 판로·수출, 컨설팅, 특허·인증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소상공인/여성/장애인/기타
기업종합지원	(사업)정보	자금·보증, 판로·수출, 인력, 창업·벤처, 특허·인증, 기술, 공공구매, 조세, 기타	각 유관기관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자문/컨설팅	서비스	(경영자문)경영, 인사·노무, 기술·생산, 자금·채무·법률, 마케팅, 기타/(컨설팅)경영전략, 채무, 인사·노무, 생산, 제품개발, 마케팅, 규격·인증, 지적권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소상공인
기업민원	서비스	기업활동 주기별 서비스 ·창업(공장설립, 행정처리) ·운영(R&D, 구매·생산, 판매, 수출입) ·지원(총무, 인사, 재경) ·변경·폐업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소상공인
기업애로	서비스	자금, 인프라, 판로·수출, 공장, 인력·교육, 기술·인증, 창업·벤처, 기타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수출	정보/서비스	(정보)수출관련 정보/(서비스)자금, 인프라, 판로·수출, 공장, 인력·교육, 기술·인증, 창업·벤처 관련 애로해소	각 유관기관	수출 중소기업
투자	정보	FEZ, 외국인단지, 국가·일반·농공단지정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내외 기업
산업입지	정보	산업단지 정보	충남도/국토부	국내외 기업
취업/채용	정보	채용·인재, 인력양성·고용훈련 정보	고용부/노사발전재단	국내기업/구직자
지리	정보	부동산, 생활, 통계, 지리정보	충남도	모든 경제주체
부동산	정보	부동산 관련 종합, 공시지가정보	충남도/국토부	모든 경제주체

자료: 충남도 홈페이지.

IV.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실태 조사

1. 중소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분석

① 조사 개요

■ 충남 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²⁾의 중소기업 지원대상 주소를 협조 받아 조사표 총423부를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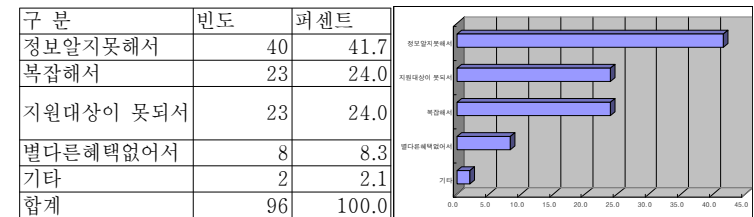
- 이 중 105부를 회수하여 회수율 24.8%를 보였으며, 설문문항은 총 39문항으로 지원제도 인식, 지원제도 활용, 지원제도 중복 및 지원절차,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방법 등으로 구성

②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이용경로

■ 중소기업지원사업을 접하게 되는 정보인지 경로를 묻는 질문에 '중소기업청 홍보' 37.0%, '인터넷상의 웹사이트' 22.0%, '신문잡지' 10.0%, 유관기관인 '조합협회의 홍보' 9.0%, '기타 정부기관 홍보' 9.0%, '다른 주변기업을 통한 인지' 8.0% 순으로 나타남

- 이는 중소기업청의 인쇄매체를 통해 지원제도를 주로 접하고 있음은 물론 인터넷을 통한 지원제도를 인지하는 기업도 상당 수 있어 온·오프라인을 모두 활용한 지원제도 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임

<그림 4-1>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이용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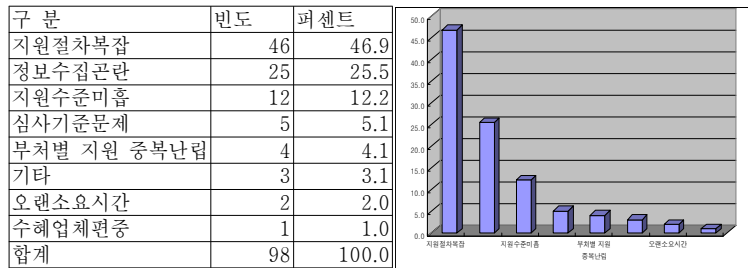
■ 지원제도 활용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지원정보를 알지 못해서' 41.7%, '지원절차가 복잡해서' 24.0%, '지원대상이 되지 못해서' 24.0%, '별다른 혜택이 없어서' 8.3% 등

2) 충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현재, 충남경제진흥원으로 개명함.

의 순으로 나타남

- 이는 중소기업인들의 정보부재의 문제와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지원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함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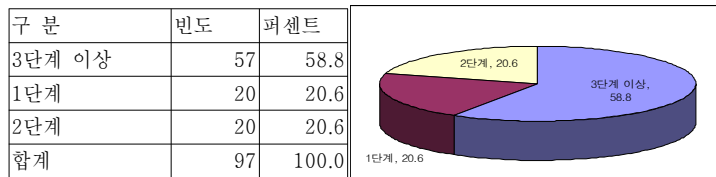
<그림 4-2> 중소기업 지원제도 미활용 원인



③ 중소기업지원제도의 이용상 문제점

- 중소기업지원사업 이용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복잡한 지원절차(신청·심사·집행)' 46.9%로 가장 높았고, '관련 정보수집 난해' 25.5%, '미흡한 지원수준' 12.2%, '심사기준의 객관성 결여' 5.1%, '부처별 지원제도의 중복 및 난립' 4.1%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지원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심사기준 문제의 경우 브로커의 문제도 기타의견에서 제기된 바 있음

<그림 4-3> 중소기업 지원시 평균적인 소요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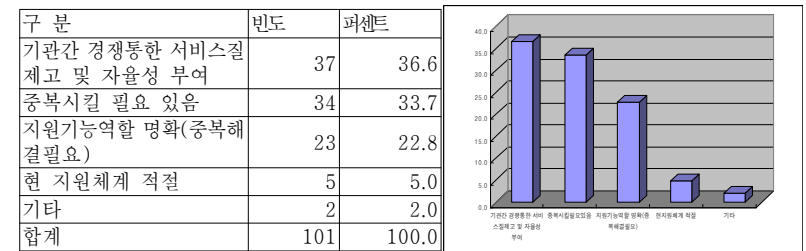


- 중소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때 소요되는 절차의 평균 단계를 묻는 질문에 '3단계 이상'이 58.8%로 가장 높았고, '1단계', '2단계'로 응답한 비율이 20.6%로 나타남

- 이는 지원절차의 복잡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따라서 지원기관이 다양해지고 전문화되는 추세를 반영한 지원절차 간소화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함

- 지원기관들간의 중복지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기관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36.6%, '수요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경우 중복이 필요함' 33.7%, '중복문제해결이 필요한' 기관별로 지원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22.8%, '현재 지원체계 적절' 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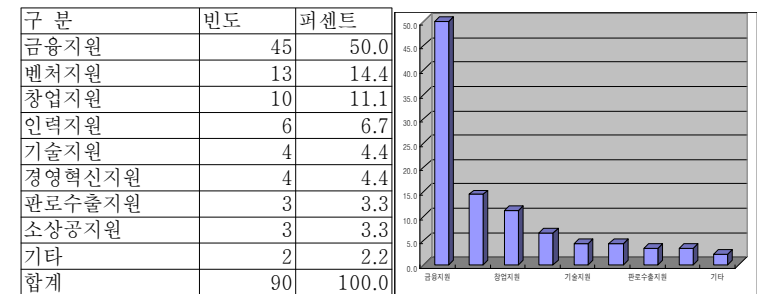
<그림 4-4>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중복지원 여부



- 이는 수혜자 입장의 경우 경직된 지원보다 지원기관간 경쟁과 그에 따른 자율성 부여로 서비스 만족도를 의식하고 있으며 중복의 문제도 필요한 중복은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아울러 지원기능 및 역할을 명확하게 하여 불필요한 중복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함

<그림 4-5>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가장 중복적 지원사업 분야



- 지원받은 시책 중 가장 많이 중복된 지원사업을 묻는 질문에‘금융지원(자금지원)’이 50.0%로 가장 높았고‘벤처지원’12.4%,‘창업지원’11.1%,‘인력지원’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2. 중소기업지원기관 대상의 설문조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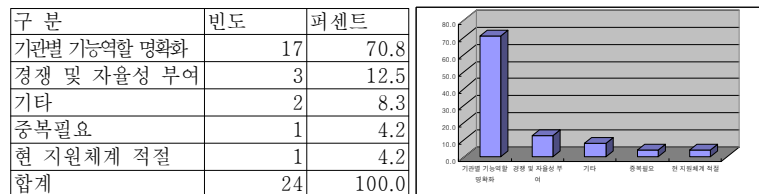
① 조사 개요

- 중소기업 지원기관 대상 설문조사는 충청남도청,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전충남 중소기업진흥공단 북부지부 등 여러 지원기관에 협조를 받아 총 70부를 배포하여 24부를 회수하여 회수율 34.3%를 보임
- 문항의 구성은 지원제도의 문제, 지원제도의 업무중복 및 업무협조,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중소기업인 대상설문 공통)을 위한 방안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조사문항은 총22문항으로 서열척도와 명목척도를 혼용하여 사용함

② 중소기업지원제도의 중복성 여부

-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원제도에 대한 중복의견을 묻는 질문에서‘지원기관별 기능 및 역할 명확화’70.8%,‘기관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와 자율성 부여’1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6> 중소기업 지원기관간 지원제도의 중복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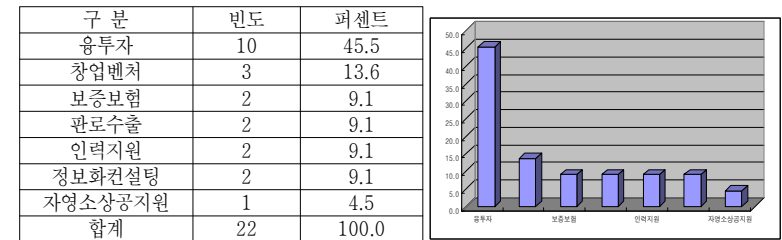


- 중소기업 지원기관 담당자들에게 주요 중복시책의 분야에 대한 질문에‘융·투자(자금지원)’분야가 45.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창업·벤처’13.6%,‘보증·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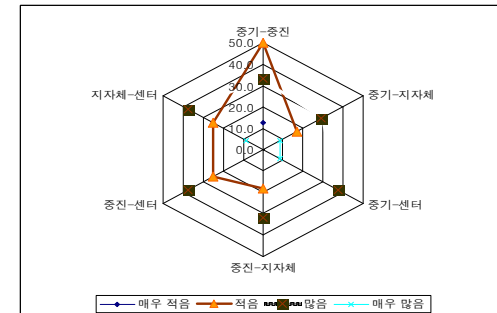
‘관로수출’,‘인력지원’,‘정보화·컨설팅’모두 9.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는 수혜자인 중소기업인들의 설문에서 자금관련 부문에 가장 많은 관심과 중복성을 지적한 것과 유사함

<그림 4-7>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중복지원 심각한 분야



<그림 4-8> 중소기업 지원기관간 지원기능 중복 정도



<그림 4-9> 지역내 중소기업 지원기관간 협조 정도

구 분			주요협조기관				
			중기청	중진공	지방중기청	지방중기센터	유관기관
소속기관	지방중진공	빈도	0	2	0	1	5
		소속기관의 %	.0%	25.0%	.0%	12.5%	62.5%
		전체 %	.0%	8.7%	.0%	4.3%	21.7%
	지자체	빈도	2	2	4	4	3
		소속기관의 %	13.3%	13.3%	26.7%	26.7%	20.0%
		전체 %	8.7%	8.7%	17.4%	17.4%	13.0%
전체	빈도		2	4	4	5	8
	소속기관의 %		8.7%	17.4%	17.4%	21.7%	34.8%
	전체 %		8.7%	17.4%	17.4%	21.7%	34.8%

주: $\chi^2=6.799$, $df=4$

■ 중소기업지원기관간 지원기능 중복정도를 묻는 질문에 전반적으로 중복정도가 많다고 응답함

- 구체적으로 중기청-중진공의 경우 중복정도가 '많음' 33.3%, '적음' 62.5%로 가장 중복성이 적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중기청-지자체의 경우 '많음' 37.5%, '적음' 16.7%, 중기청-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경우 '많음' 45.8%, '적음' 0.0%, 중진공-지자체의 경우 '많음' 31.8%, '적음' 18.2%, 중진공-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많음' 37.5%, '적음' 25.0%, 지자체-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많음' 45.8%, '적음' 25.0%로 나타남
- 이는 중소기업인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와 상이한 것으로 중앙과 지방의 기관인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중복성이 가장 심하다고 응답함

■ 지방중진공의 경우 중앙지원기관 성격의 지방청으로서 유관기관과 가장 많은 업무협조를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교적 고른 협조형태를 보여줌

- 이 중 지방청인 지방중기청과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인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상대적으로 많은 협력을 하고 있는 반면, 중앙청인 중기청과 중진공과는 협조수준이 낮은 나타남

<그림 5-10> 지원업무 수행에 따른 중복도(교차분석 결과)

구 분			수행업무중복도			전 체
			많이 중복	일부 중복	중복없음	
소속기관	지방중진공	빈도	0	6	2	8
		소속기관의 %	.0%	75.0%	25.0%	100.0%
		전체 %	.0%	27.3%	9.1%	36.4%
	지자체	빈도	8	6	0	14
		소속기관의 %	57.1%	42.9%	.0%	100.0%
		전체 %	36.4%	27.3%	.0%	63.6%
전체		빈도	8	12	2	22
		소속기관의 %	36.4%	54.5%	9.1%	100.0%
		전체 %	36.4%	54.5%	9.1%	100.0%

주: $\chi^2=9.039$, $df=2$, $p=.011$

■ 지원업무 수행에 따른 중복도에 관한 교차분석결과, 지방중진공의 경우 '일부 중

복' 75.0%,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많이 중복' 57.1%, '일부중복' 42.9%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교적 고른 업무협조를 보이는 반면에 업무수행 중복정도는 보다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③ 설문조사 분석결과 및 시사점

■ 중소기업지원사업의 복잡성, 소요절차, 홍보부족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인들은 중복성 개선, 기관통합 및 창구단일화, one-stop서비스강화를 지적하였고, 지원기관 입장에서는 지원업무 및 기능 재정립, 업무 명확화를 강조
- 이는 지원입장과 수혜입장의 차이에 따라 상이한 결과이지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모두 고려해야할 사항임

■ 중앙과 지방의 차이에 따라 연계·협조하는 지원기관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이는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일 수 있지만, 중복성 측면에서 보면 협의·조정 기관이 다양화되어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

-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면 첫째, 지원(제도)사업은 정보부재와 복잡성, 그리고 소요절차 문제가 이용상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정보인지경로는 중기청의 홍보와 웹사이트를 주로 이용하고 있어 홍보강화 및 접근성 제고가 필요함
- 둘째, 지원제도의 중복에 대한 의견은 자금관련 지원사업이 중복성이 있다고 지적하였고 지원중복은 기관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자율성을 부여해야함
- 다만, 수혜자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면 지원중복을 통해 지원의 빈도와 양을 확대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지적한 측면도 있어 수혜자의 입장은 중복의 문제보다 절차의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보고 있음
- 셋째, 중복시책문제 해결을 위해 기관별 기능 역할 명확화를 지적하여 지원기관의 역할과 지원기능 재정립이 필요하고 주요 중복 시책은 기업인 응답과 마찬가지로 자금관련 지원사업임
- 넷째, 중앙적 성격을 가진 지방중진공의 경우 유관기관과 주로 연계되어 있으며, 지자체의 경우 지방단위 지원기관과 주로 연계하고 있어 업무상 중복은 지자체가 더욱 크게 체감하고 있는 실정임

3. 중소기업 지원기관 면담조사: 충청남도지역 사례 조사

- 중소기업 지원기관 인터뷰는 충청남도청,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충남테크노파크(전략산업기획단, 기업지원단 등) 등을 대상으로 실하함
- 면담 내용은 주로 지방중소기업지원기관의 중복성 문제와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 그리고 기관간 협의 실태와 협의기능 강화에 대한 것으로 이루어짐

① 중복성 문제

- 면담결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중기센터)와의 지원 중복성은 비교적 적다는 것임
- 단, 직접금융 성격의 융자기능이 TP에 없기 때문에 중기센터의 융자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TP와 통합적인 추진방향 모색 필요가 있다고 지적
- TP는 기업지원역할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직접금융(융투자)이 필요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지방중기센터이므로 중복성은 시책통합 혹은 협의기능 강화로 해결 가능함을 지적함
- 또한 중진공과는 다르게 지방의 TP는 생산공장 부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지방의 실정에 맞는 지방중심의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이 논의되어야 하며, 중기센터는 주로 소기업(영세기업) 지원을 담당하고, TP의 기업지원부서는 선택과 집중의 논리로 보다 성과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임
- 지원부문상 자금지원과 기술개발관련 자금지원의 중복성 문제는 없으며 또한 기술개발지원자금은 융자가 아닌 순수 지원성격으로 평가에 의해 지원의 계속성이 결정된다는 것임

② 중앙정부 및 지자체 단위의 지원

- 지방-중앙 단위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의 차이는 중앙지원은 서울·경기에서 대부분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라 지방단위에서 독자적인 지원이 필요함
- 기술개발 지원과 관련하여 지자체에 따라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
- 예를 들어, 충남은 자체 R&D 시책이 없고, 경기·울산의 경우는 있다. 현재 지방정

부(TP, 센터 등)의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개발지원시책은 순수 독자적인 자체 지원시책은 없다고 지적

- 기술개발을 위한 대학-중기업체-연구기관 중심의 산학연 협력사업 실행은 TP의 주요 역할로서 비교적 잘 협력하고 있고, 일단 TP내 센터(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등) 협력적 거버넌스는 외형적으로 구축되어 있음
- 단, 지원정보를 축적하여 보다 일관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시급함 이를 통해 협의체운영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협의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기술개발과 관련된 지원에 있어 지방의 중소기업청은 사실상 옥상옥의 효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함

- 중앙부처의 중기청, 중진공과 지방정부(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테크노파크 등)의 중소기업시책의 차이를 충청남도 중소기업 지원기관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를 보면, 중앙과 지방의 중소기업 지원은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 지역실정에 맞는 입지지원의 경우는 지자체에서 비교적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임

③ 협의기능

- 지역신보와 중기센터, 그리고 TP간 상호연계가 필요하며 특히, 중기센터와 TP의 연계가 시급하다. TP의 경우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지원업무 배분 시 문제점은 협의기능이 원활하지 못해 칸막이식 행정이 우려되고,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협의기능의 정도는 협의체가 아직 없어 협의기능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④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실태 조사 결과와 시사점

- 지원사업의 복잡성, 소요절차, 홍보부족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인들은 중복성 개선, 기관통합 및 창구단일화, one-stop서비스강화를 지적하고, 지원기관 입장에서는 지원업무 및 기능 재정립, 업무 명확화를 강조한다. 이는 지원입장과 수혜입장의 차이에 따라 상이한 결과이지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안이다.

■ 중앙과 지방의 차이에 따라 연계·협조하는 지원기관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이는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수 있지만 중복성 측면에서는 협의·조정 기관이 다양화되어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아울러 지방중소기업의 지원으로부터의 시각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중심의 독자적인 중소기업지원사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지원기능 명확화를 통한 지원역할 재정립과 협의기능을 강화가 필요하다. 이는 종국적으로 지원정책의 통합적 추진으로 지원의 전문성을 극대화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V. 벤치마킹 사례 검토³⁾

1. 영국 비즈니스 링크(Business Link, BL) 개요

■ 기업지원활동의 원스톱 샵(One-stop shop)으로서 기업지원 관문역할 수행

- 단일 접촉지점을 통해 중소기업에 위한 전문적 정보와 조언 통로를 제공하는 업체와 정부 간 지방 제휴활동의 전국 네트워크
- 창업에서 성장 및 승계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지원업무 수행
-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보다는 상담, 기본정보 제공, 지원수요 평가, 적절한 지원기관 알선 등 담당

■ Business Link는 잉글랜드 지역을 커버하며, 이외의 지역에서는 다른 명칭의 기관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

- Business Gateway(스코틀랜드), Business Eye(웨일즈), InvestNI(북아일랜드)

■ 서비스 제공방식

- (Click) 비즈니스링크 웹사이트(National Business Link Website)
- (Call) 실시간 상담 전국 전화번호(0845-600-9006)
- (Visit) 지역 비즈니스링크(Local Business Link)

■ 주요 기능 : IDB 모델

- 정보 제공(Informing)
 - "How-to" 가이드, "No-Nonsense" 가이드, 우수사례, 케이스 스터디
 - 웹기반 정보 서비스, 분야별 지원서비스 안내
- 진단 평가(Diagnosing)
 - 온라인 자체평가진단 프로그램, 사전 전화상담에 의한 진단
- 중개 서비스(Brokerage)
 - 현안에 대한 심층지원을 위해 최소 3명 이상의 전문가를 중개

■ 그간의 성과

3) 벤치마킹 사례조사는 중소기업청 자료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통합적 추진방안」(충남발전연구원, 2009)을 토대로 작성

- '06회계연도 중 약 61만개의 기존 사업체와 약 18만명의 창업 준비자들이 Business Link 서비스를 이용
 - 월 평균 약 100만명이 온라인 서비스(www.businesslink.gov.uk) 방문
- 영국 내 소규모기업 사이에서 약 80%의 높은 브랜드인지도 기록
- 영국정부가 비즈니스 링크를 통해 지출한 1파운드는 2.26파운드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HM Treasury&BERR, '08)

■ 관련동향

- '11년까지 각 부처의 대(對)기업지원 관련 웹사이트를 Businesslink.gov로 통합 일원화할 것을 권고(Varney Report)
 - 기업지원 관련 웹사이트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의 부처별 웹사이트 수를 점진적으로 줄여 단일 관문화(single gateway)
- 공공자금으로 운영되는 약 3,000개의 기업지원제도를 '10년까지 100개 이하로 대폭 정비하는 기업지원단순화계획 추진
 - 정부는 '06년 기업지원제도에 26억 파운드를 투입했지만 지원제도가 각 부처에 중복·산재되어 중구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소기업들에 신청 등 절차에 따른 혼란을 가중
 - 지원의 '양'이 아닌 '수'를 줄이는 개념으로, 기업이 제도를 쉽게 이용하도록 중복 없이 간소하게 정비
 - 제도 정비방안은 비즈니스링크(Business Link)를 통해 주로 진행될 예정

2. 우리나라 Biz-info 개요

■ 중소기업 도우미 SPi-1357 시스템을 재정비 → Biz-info로 개선

- '05년 지원기관 및 지원내용이 복잡·다양하고 통합적 안내·검색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SPi-1357 정책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
 - On-line(SP이 시스템) : 334개 기관 6,758개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고, 분야별 검색-온라인 사업신청 등 맞춤형 서비스('06.7~)
 - Off-line(☎1357 콜센터) : 전문상담원 11명과 정책실무자 7,870명을 '전국 단일의 전화망'으로 연계하여 실시간 애로상담('06.1~)
- 그러나 정책정보의 통합안내 및 실무담당자 연계 위주로 운영되어 중소기업과 창업 준비자가 느끼는 현장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

- 또한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은 수요자입장에서 정책정보제공, 애로상담 등과 통합제공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진행
- 특히, SP이시스템은 중소기업정책은 지원기관이 많고, 내용도 복잡하며 지원기관별로 홈페이지가 있지만 종합적 연계가 미흡하다는 평가
- 이외에도 기업지원 포털은 많으나 단일관문(single gateway)이 부재해 정책수요자의 혼란 유발
 - SPi1357(정책정보제공, 중기청),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자영업컨설팅, 소상공인진흥원), 중소기업지식나눔터(지식공유, 중진공), InnoNET(종합기업서비스정보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이 산재되어 운영
- 이에 따라 SPi-1357시스템(www.spi.go.kr)은 이러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여 현재 Biz-info(www.bizinfo.go.kr)로 업그레이드되어 운영중임

■ 중소기업 종합지원 포털 지향(한국형 Business Link)

- 2008년 Spi-1357의 정책정보 중심 정보제공에서 2008년 12월 Bizinfo로 개편하여 현재, 정책정보 이외에 경영·행사정보, 비즈니스 가이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중소기업종합정보서비스(Bizinfo)로 브랜드 개편 이후 중소기업 종합 포털역할을 지향
- 현재 중소기업 지원정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정보, 중소기업 종합상담서비스, 고객 맞춤형 정보 등을 Bizinfo를 통해 추진하고 있음

■ 주요 기능

- 중소기업 지원정보 제공
 - 정책정보, 경영·행사정보, 파워콘텐츠, 비즈니스 가이드, 기타 연계정보
 - 정부부처, 유관기관 등 총 434개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정책정보를 9개 분야 4,275개 사업별로 제공
- 중소기업 종합상담서비스 제공
 - 비즈니스 지원단 연계, 1357 전화상담, 온라인 민원, 상담사례
 - 1357콜센터운영으로 국번없이 1357만 누르면 상담원 및 분야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중소기업인의 궁금증을 신속·친절하게 상담하여 솔루션을 전달하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

- 고객 맞춤형 정보 제공
 - 뉴스레터 서비스, 이메일 서비스, 모바일 정책 서비스

3. 시사점

- 기업지원 창구의 단일화(single gateway) :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One-stop 포털구축 및 이와 연계한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
- 다수의 기업지원 포털은 오히려 정책수요자의 혼란을 유발하므로 대(對)기업지원 관련 웹사이트를 통합 일원화하는 추세
- On-line상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제공(통합·안내 서비스)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 전반에 걸친 컨설팅 및 민원사항 해소
 -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제공에서부터 창업 → 성장 → 승계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보다는 상담, 기본정보 제공, 지원수요 평가, 적절한 지원기관 알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single gateway 구축을 통해 기업지원정책의 전달체계 개선을 도모하며, 이를 토대로 정책수요자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

4. 충남형 Business Link의 도입가능성 검토

① 서비스 기능 및 제공방식 측면

- 충남형 기업지원 포털 구축 시 고려해야할 서비스 기능과 제공방식은 무엇인가?
- 「기업 SOS 충남넷(giupsos.chungnam.net/)」을 통해 초기단계의 Business Link 가동중으로 이를 토대로 지역단위(area-based)의 지원정보 및 작·간접적 기업지원 서비스를 on-off line으로 제공
 - On-line(기업 SOS 충남넷) ;
 - 자금지원, 주변인프라, 판로·수출, 공장관련, 인력·교육, 기술·인증, 창업·벤처, 기타 등 전 분야에 걸쳐 애로상담 신청 → 처리과정에 대한 안내 메시지 발송 → 처리결과를 홈페이지상에서 확인
 - Off-line(충남 Biz-콜센터, 기업애로지원센터와 연계지원) ;
 - ① 기업애로 해소
 - (Call) 기업애로내용을 상담원과 직접통화
 - (Fax) 기업애로 신청서 다운로드 → 애로사항을 구체적 기술하여 신청

- (Mail) 기업애로 내용을 구체적 기술하여 우편으로 신청

② 경영자문 및 컨설팅

- (Mail, Fax, e-mail, On-line) 경영자문 신청 → 자문위원 매칭 → 자문활동 → 평가
- (Mail, Fax, e-mail, On-line) 컨설팅 신청 → 접수평가 및 선정 → 컨설팅 협약 및 진행 → 중간점검 → 완료보고 및 평가 → 만족도 조사 → 지급금 지급
- ③ 기업종합지원
 - 지원분야별로 사업개요, 지원절차, 지원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은 On-line상에서 이루어지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없음(실제 지원은 해당 지원기관 또는 Biz-info상에서 행하여짐)
- 이상에서처럼 충남도는 「기업 SOS 충남넷」을 기업지원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와 연계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정책 정보 시스템을 기 가동 중임
 - 다만, 수요자의 이용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사업정보와 서비스를 체계화·종합화하여 시스템에 반영해야함

② 기능(서비스 내용) 중복성 측면

■ 기존 기업지원 포털과의 중복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 인가?

- 2011년 4월 현재, Bizinfo상 충남 주관사업 23건, 충남 경제진흥원 주관사업 2건 등 총 25건의 지원사업이 수록되어 있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기업 SOS 충남넷」에도 수록되어 있는 등 중복적으로 정보제공
- 또한 Biz info에서 제공하는 비즈니스 지원과 「기업 SOS 충남넷」에서 제공하는 경영자문 및 컨설팅 지원 역시 큰 차이가 없는 중복적인 서비스임
- 따라서 기존 전국단위의 기업지원 포털인 Biz info와는 차별화된 정책정보 제공 및 특화된 서비스 발굴·제공이 지역단위 「기업지원 온라인 포털」 구축의 관건임
- 다만, 현재 충남도 홈페이지상에서 수출기업지원, 산업입지정보, 투자정보, 구인·구직정보, 부동산 정보, GIS 지리정보 등을 유관기관과 링크(link)시켜 제공하고 있는 바, Biz info와의 차별화 측면에서 이들 정보를 「기업 SOS 충남넷」 상에서 통합적으로 운용·제공하는 것도 중복성 문제를 해소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사업 중 Biz info상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매우 제한적이며, 충남의 경우에는 단 1건도 없음
- 따라서 충남도 주관사업을 「기업 SOS 충남넷」 상에서 온라인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기술적 조치 강구

③ 구축 절차상 측면

■ 충남형 기업지원 포털 구축을 위한 선결요건은 무엇인가?

- 중앙부처, 지자체, 그리고 유관기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복잡·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지역단위에서 운용하기 위해서는 지원기관간 파트너십 구축이 매우 중요
- 더욱이 기업지원 서비스의 단일관문(single gateway)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관기관들이 파트너로써 참여하게 유도함과 동시에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간 원활한 업무연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 현재 충남도와 기업으로 협약을 맺은 기관은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TP, 충남경제진흥원 등 총 11개 기관임
- 그러나 정책수요자인 중소기업에 제공할 정보의 내용 및 범위와 서비스 수준에 따라 추가적인 협약 대상기관이 요구되며, 협약내용도 단순한 업무협조 수준을 넘어서 지원포털 구축에 필요한 정보공유 및 제공, 그리고 일괄적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제반 업무협약이 필요할 것임

VI. 충남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효율화 방안

1.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①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의 기본방향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을 구축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중소기업의 지원체계를 통합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시스템이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함
- 둘째, 분산된 중소기업지원정책을 시스템적으로 통합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해야함
- 셋째, 다양한 중소기업지원사업의 창구를 일원화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그 지원성과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함

<표 6-1> 국내외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통합추진 요인과 실천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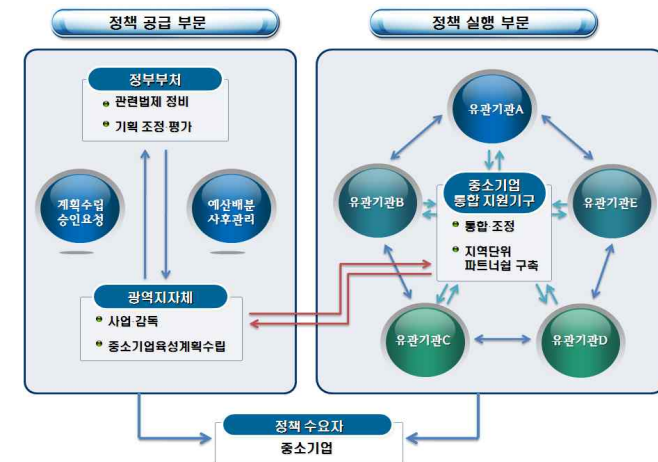
구분	국내사례	해외사례	주요 제도개선 5대 과제	실천수단
추진주체	• 협의·조정·통합 관련 기능 미흡	• 전담지원기구 설치	• 중소기업 통합지원기구 마련	(1안) 테크노파크 활용 (2안) 경제진흥원 활용 (3안) 제3섹터 설립(민관공동기구)
법제	• 중복 또는 혼재	• 개발법 통합·재정비 • 지원제도 간소화	• 중소기업 지원법체계 정비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지방중소기업 육성부분 분리 별도 제정·운영
상호연계	• 기관간 상호연계 미흡	•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현장 밀착형 일선조직 구축 • 중소기업지원 Hub기관 육성	중소기업통합지원기구 설립과 경제진흥원 특화(양 기관 연계)
역할분담	• 정부주도의 top-down 방식	• 권한이양 • 자율성 확보	• 정부와 지자체간 역할 및 기능 명확화	(1안) 정부정책범위내에서 지역계획 수립 (2안) 지역의 독립적 시책수립 (3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0조의 육성계획 수립조항과 연계
예산배분	•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발굴 한계	• 예산지원체계 개선 - bottom-up 방식	• 예산배분방식 개선 • 지원예산의 일정비율(%)을 지자체에 이양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일부를 bottom-up 방식으로 배정하는 사업 사업운영

- 넷째, 유사한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지원업무, 그리고 지원조직을 통합하고 재구축하여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해야 함
- 다섯째,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 밀착형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함
- 여섯째, 지원항목의 다양화와 지원창구의 통합운영이 가능해지며, 마지막으로 예산의 포괄적 운영으로 보다 탄력적이고 지방주도의 자율적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함

② 통합추진 모형 구축

- 현행, 중소기업지원정책과 사업은 지원주체별 역할 및 기능이 불명확하여 사업운용이 다소 유사·중복적일 뿐만 아니라, 이를 조정·총괄할 수 있는 기능 또한 부재하여 정책전달 또는 사업추진체계상에 비효율적인 요소가 상존하고 있음
-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사업의 유사·중복성과 지원주체의 분절적인 문제를 완화시켜야함
- 이를 위해서는 지원사업과 지원주체를 기능적·조직적·제도적인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즉, 각종 지원사업의 운용을 체계화하고 지원주체, 지원사업간 유기적인 연계의 필요성에 따라 지원기능, 지원조직, 지원제도 등을 통합적인 체계로 재편하는 통합추진모형을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제시하고자 함

<그림 6-1>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2. 통합적 추진을 제도개선 방안

①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조정기능 강화

① 기존 문제점 및 정책과제

- 지방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공급자 주도로 되어 있으며 지원기관별로 별도의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지방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이 여러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각 기관은 소관 법령 및 업무에 따라 각기 다른 중소기업 지원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
- 이에 따라 지방정부에서 집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 시책 간 상호보완성이 미흡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중복지원의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국고와 지방비가 혼재되어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지방비는 국고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지방정부 실정에 적합한 독자적인 정책개발 및 시책 추진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로 기업 수요에 적합한 정책개발 및 체계적 지원이 미흡

하고 백화점식 지원시책으로 인해 정책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어렵게 만들

-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대부분이 그대로 지방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여기에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시책이 겹치면서 예산규모도 크지 않는 정책과 시책이 추진되고 있어 정책수요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예산 확보를 위해 하나의 정책이 여러 개의 지원시책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정책목표 달성 및 전달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음
-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정책목표에 함몰되어 지원시책이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추진됨에 따라 정책 수요자인 중소기업은 어떤 내용을 지원받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맞춤형 정책개발이란 명분아래 공공기관은 유사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거나 기존지원시책을 몇 개로 나누어 별개의 사업으로 운영함으로써 예산 및 자리 확보에 연연하고 있는 실정

② 제도개선 방안

가. 기본방향

- 광역 자치단체별 '중소기업통합지원기구'를 중심으로 역내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단순화·종합화·체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중앙정부 위탁사업이라 할지라도 성과가 미흡한 경우 사업 조정을 명문화)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집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예산사전 조정을 통해 지방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성과 제고 및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함
- 가칭 '중소기업통합지원기구'에서 지역밀착형 중소기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존 중개기관(지원기관)과의 통합 및 조정기능 부여하는 동시에 또한 지방에서 각 부처가 실시하고 있는 업무 중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업무는 '중소기업통합지원기구'로 이관토록 해야 할 것임
-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경우 새로운 사업연도 개시 전에 의무적으로 '중소기업통합지원기구'와 사전 협의토록 해야 함
- 사례로는 정부의 각종 법령 및 제도 입안 시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중소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개선을 요구하는 상시평가토록 제도화함(미국은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중소기업 영향평가제도가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지원기구 운영방안은 아래와 같음

나. 개선방안

▶ 1안(테크노파크를 활용하는 방안)

- 먼저 테크노파크(산업기술단지)는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지역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2007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제에 따라 지역산업육성의 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을 중소기업 통합지원기구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임
- 현재 테크노파크 이사회 이사장은 사도지사가 맡고 있으며 조직은 지역의 산업육성 기획을 총괄하는 전략산업기획단, 기술기반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기업지원단, 지역의 각 전략산업별 육성책임을 맡고 있는 산업특화센터로 이루어져 있어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적인 체계는 갖추고 있는 실정임
- 동 기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공동 운영하는 형태를 갖춰 중앙 및 지방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경영의 자율성 및 성과에 따른 보상시스템을 도입하여 중소기업 지원성과를 제고해야 함
- 동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체, 학계, 연구기관 대표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운영위원회를 구성이 요구됨

▶ 제2안(경제진흥원을 활용하는 방안)

- 경제진흥원은 지역경제의 핵심주체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 사도에 설립되었으며 산업현장의 어려움과 지원요구를 수렴하고 창업, 경영, 자금, 인력, 기술, 정보제공 및 제품 판로개척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동 조직을 확대개편하여 광역단위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시책을 총괄하는 '중소기업통합지원기구'로 활용하는 방안임
- 동 진흥원은 그동안 다양한 유형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인지도 및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상황이며 별도의 조직개편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자율성 확보를 위해 재원을 중앙 및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분담하여 중앙 및 지방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경영의 자율성 및 성과에 따른 보상

시스템을 도입하여 중소기업 지원성과를 제고해야 함

- 동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체, 학계, 연구기관 대표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 제3안(제3섹터를 설립하는 방안)

- 제3섹터는 공공부문의 공익성과 민간부문의 기업성을 결합한 민관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사업주 단체(중소기업중앙회, 상공회의소 등)가 일정 지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역내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 친화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음
- 기존 중소기업 중개기관(지원기관)과 업무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기업통합지원기구'를 중심으로 조직과 인력을 일부 조정하고 나머지 기관은 역할 분담을 명확화하여 지역내 중소기업정책 전달체계를 단순화하며 사전 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함
- 기존 조직을 무리하게 통폐합할 경우 부작용 및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능 중심으로 지원기관을 새롭게 재편하고 지원기관별 경영목표 및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동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체, 학계, 연구기관 대표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② 지방 중소기업 지원관련 법체계 정비

① 기존 문제점 및 정책과제

- 지방중소기업 관련 법제는 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 전환에 부응하고자 새로운 법령의 제정 작업과 함께 기존 법률의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지방중소기업 관련 법체계가 복잡다기하고, 법 집행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산재되어 있어 지방중소기업에 도움을 준다는 기본적인 취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실정
-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중요시책 중의 하나로 지방중소기업 육성시책을 매년 개발하고 있으나, 근거법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법제 면에서 국토해양부(전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되어 있고 중소기업청은 집행기관에 불과함
- 동 법의 구성내용도 지역개발에 관한 부분과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부분으로 나

누어져 있기는 하나 사실상 지역 개발은 주거, 교통, 문화, 그리고 산업 등 모든 부문과 관련되므로 지방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와는 이질적인 내용이 혼재되어 있음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은 법률내용과 제정취지 측면에서 볼 때, 지방중소기업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관련 법률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을 통해 정책을 시행하는 체제로 법령이 제정되어 운영됨에 따라 관련 지방중소기업 진흥시책들의 유사·중복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예를 들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6조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시도지사는 5년 단위로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를 기초로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다른 법률의 규정과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동 법은 지역혁신체계,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지방대학의 육성,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지역금융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고 있으나 명시적으로 지방 중소기업 육성을 정책목표로 내세우지는 않고 있음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40조에서 시도지사는 다음 년도 관할 구역 내 지방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명시하고 지원 대상으로 지방중소기업을 명시한 반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은 산업의 지역별특화와 연계강화를 통해 산업집적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라 할 수 있음
- 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지역산업진흥계획도 시도별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발전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수립되어 있음

■ 앞서 제기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제외한 관련법계획들이 명시적으로 지방 중소기업을 지칭하지는 않으나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취지로 제정되고 수립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지역발전과 산업발전의 근간이 되는 관련 법률에서는 그 대상을 대학, 기술, 과학, 혁신, 집적, 산업 등을 포괄하고 있음

- 이러한 추상적인 대상을 위해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이며, 중소기업 관련 정책들을 수립하는 각 부처들은 소관 법령에 근거해서 정책을 개발하기 때문에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유사한 정책들의 조정을 통한 통폐합이 어려운 상황임

- 지역산업의 진흥, 발전, 혁신 등의 모호한 대상을 위해 제정된 법률의 경우, 지원 대상을 구체화, 명료화 작업을 통해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직접 지원대상은 아니지만 간접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나 일부 타 대상이 포괄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와 같이 지원 법률간 지방중소기업이란 지원대상의 교집합은 굉장히 큰 반면 나머지 여집합은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음

- 박정구(2005)⁴⁾는“정책을 통해 지향해야할 목표를 구체화한다면 법제는 이의 실현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제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중소기업관련법 체제의 재편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한 바 있음

② 제도개선 방안

■ 중소기업 관련 법체제의 개편이 선행되어야 수십 년 동안 중소기업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책의 유사중복성 문제, 부처이기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임

- 법률의 제정·개정·폐지를 통해 지방중소기업을 직접적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이하에 중소기업의 진흥, 발전, 혁신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기존 법률에서 지방중소기업 이외의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정책대상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수도 있을 것임
- 중소기업 관련정책은 새로운 정책의 개발보다는 기존 정책들의 단순화를 통해 집행절차, 정책전달체계 등 수요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으로 진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정책 공급자에 의한 경쟁구도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기는 하나 수요자인 중소기업인들은 정책 활용의 가장 큰 애로요인 중의 하나로 정보의 부족을 들고 있고 이는 복잡한 지원체계, 정책들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각종 법률 및 계획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부처들의 대부분 사업이 중점 지원대상 혹은 분야만 상이할 뿐 대체로 센터설립, 장비구축, 인력양성, 기술개발 지원 등 강조하는 분야만 달리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

- 실제로 각 광역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원정책의 경우 각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발견하기는 어렵고 중앙정부의 지원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보편적이라 할 수 있음

- 한편, 현행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중소기업 육성부분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지방중소기업 육성제도를 정착시키는 방안이라 할 수 있음

■ 지방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을 전담하는 법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단위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함

-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의 제후에 의한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벤치마킹하여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우 지역중소기업 육성시책은 대부분 동 법률의 근거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③ 현장 밀착형 일선조직 구축

① 기존 문제점 및 정책과제

■ 중소기업 지원분야(자금, R&D, 인력, 수출, 정보화 등)별로 지원기관이 난립하고 있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별도의 일선 지원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어, 이로 인해, 정책수요자인 중소기업은 어디서 무슨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실정임

- 지원내용에 큰 차이도 없으면서 지원업무 방식, 지원내용이 기관별로 다르고 실질적 도움보다는 심사·관리 기능을 중시함에 따라 지원이 규제로 변질되고, 중소기업에 행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정부가 기업에게 베푸는 시혜적인 사업으로 인식하고 일과성에 그치고 있음

- 또한 업무 및 지원방식 등이 획일적이고 현장과 거리가 있어서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성이 부족하여 현장에 적합한 맞춤형 사업이 부족한 실정임

② 제도개선 방안

4) 박정구, 중소기업시책 및 법제의 변천과 시사점, p. 46, 중소기업연구원, 2005. 6

■ 광역자치단체 산하에 '중소기업통합지원기구'를 설치하고 각 권역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진흥원'의 운영을 통해 현 중소기업 일선 지원조직을 통합정비하여 권역별 경제진흥원을 설립운영하면 지원기관 통합 정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임

- 이들 권역별'경제진흥원'이 중소기업이 일차적으로 접촉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전문성 확보 및 예산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권역별 경제진흥원을 설립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밀착형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함

■ 권역별'경제진흥원'은 중소기업통합지원기구와 협의를 통해 권역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경제진흥원 책임자에서 상당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일부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부여(경영성과에 따라 제계약 및 인센티브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권역별 경제진흥원은 소상공인, 재래시장 등에 대한 지역별 맞춤형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권역별'경제진흥원'을 통해 구역담당제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
- 구역별, 업종별, 상권별 담당제를 지역 중소기업 특성에 맞게 도입하여 찾아가는 실질적인 지원서비스 제공과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품질 제고를 위해 지원업무 담당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서비스 마인드 제고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받은 담당자는 순환근무를 최대한 억제하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로테이션 방식으로 일정 인원(직원의 1/3)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 실시하고, 기본소양교육과 경제 상황 및 경제정책에 대한 교육,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하고 맞춤형 지원 디자인 능력 배양해야 할 것임

▶ 중소기업통합지원기구와 경제진흥원을 중소기업지원의 허브(Hub)기관으로 육성

■ 이들 양 기관을 통해 지방 중소기업정책과 중앙정부 정책 간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중앙정부의 경제정책 운용방향 등 관련 정보를 전파하고 지역의 실태를 중앙에 알리는 역할을 수행토록 함

- 지방에 친기업적 마인드 전파 및 기업환경 개선 추진(이를 위해 통합조정기구 책임

자는 부지사급으로 격상)하고, 중앙정부는 지역 산업 및 지방특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이에 대한 실무업무는 중소기업통합지원기구가 담당)해야 할 것임

- 이미 지역에 설립된 업종별 센터, 창업보육센터, TP, TLO 등 특수목적의 지원기관을 '중소기업통합지원기구'에서 총괄조정하고 있으므로, 지역내 중소기업 지원기관간 업무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번의 신청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체제를 구축하도록 함
- 또한 신청서류들을 통일화표준화하고 DB로 구축하여 1년에 1회 제출 및 작성으로 모든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④ 정부와 지자체간 역할 및 기능 명확화

① 기존 문제점 및 정책과제

■ 지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지원정책의 경우 대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을 위탁받아 실시하거나(여기에 매칭 형태로 일부 예산을 배정하는 경우), 자체 사업의 경우에도 중앙정부와 큰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정책체계를 가지고 있음

- 먼저 정책-시책-사업으로 구분되는 정책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당해 연도 혹은 임기 중 도정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 개발될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시책개발 및 그에 따른 사업시행을 체계화하는 것이 유사 중복사업을 억제하고, 정부와 지자체간 역할 및 기능을 명확화하는 것이 우선

■ 대부분의 정책이 예산 확보에 맞춰진 관계로 톱-다운 방식으로 시책을 추진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지역적 차별성을 부각하기 어렵고 중앙정부에서 시달하는 정책목표에 맞추다 보니 지역적 특성을 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 지방정부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예산 및 인력부족 등으로 자율적으로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지자체가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고, 대부분의 사업이 5년 내외의 한시적 지원기간을 두고 운영함으로써 해당 단체의 장에게는 혁신사업보다는 5년 후 기관의 존립여부가 더 큰 관심이 되고 있는 것 역시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을 것임
- 각 부처별로 유사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지역에서는 그에 따른 별도의 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각 사업별로 체계적인 역할 분담이 미흡하여 정책의 중복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음

② 제도개선 방안

■ 중소기업 기본법 제 3조에 의하면 정부는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 정책을 세워 실시해야 하며 지자체는 관할 지역특성을 고려, 지역 중소기업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정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 정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 이로 인해,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중기청과 지자체간에는 유사업무 추진으로 일부기능 중복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정부와 지자체간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중소기업 지원의 유사·중복 문제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분담체제를 구축할 경우,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어떻게 한정할지 여부가 쟁점사항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앙정부가 수립한 정책의 범위 내에서 관할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고유 정책을 수립하여 차별화하는 방안, 둘째, 별도의 독립적인 정책수립을 통해 중앙정부와 병행추진하는 방안, 셋째, 현행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40조의 육성계획 수립조항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수 예산이양을 통한 지방의 자율성 확보

① 기존 문제점 및 정책과제

■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 1조 1,795억 중에서 국비 2,573억, 국고성 기금지원(금융지원) 8,100억원을 제외하면 도비와 사군비에서 지원하는 규모는 1,029억원에 불과한 규모임

- 뿐만 아니라 2009년 충남도에서 시행하는 39개 정책을 실행하는데 책정된 예산규모

가 579억에 불과하여 개별 정책당 약 15억원에 불과한 실정임

- 제한된 예산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정책예산의 규모가 작아 소수의 기업들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형성하게 되어 지방 중소기업의 정책 체감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각 사업연도에 집행하는 중소기업 지원 예산의 10% 미만을 도비가 차지하고 있어 지역 실정에 적합하고 특화된 정책개발 및 정책 추진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지역 단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원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일정비율을 광역 자자체에 이양하여 자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단계임

- 기존 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에서 적절한 중소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요청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승인해주는 Bottom-Up 방식의 정책전달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 배분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과거 균특회계에서 처리하던 방식을 일부 수용하여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체계를 개선하되 이들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됨

② 제도개선 방안

■ 지방정부는 해당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중앙정부(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사업타당성 여부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예산을 배정받는 방식을 도입(우선 지역 중소기업 육성자금 혹은 균특회계의 일부를 Bottom-up 방식으로 배정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소기업통합지원기구 및 권역별 경제진흥원 책임자 등과 협의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중소기업청은 각 시도의 중소기업육성 계획서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사업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토록 함

■ 지방 중소기업 육성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정책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책무성을 대폭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예산배정방식과 같이 실행제로 운영하여 지방정부 중심의 지역중소기업 육성정책 추진을 지원(지방정부가 요청한 내용을 검토하여 중앙정부가 예산을 배정하는 이른바 'Bottom-up 방식'의 예산 배정방식을 확대)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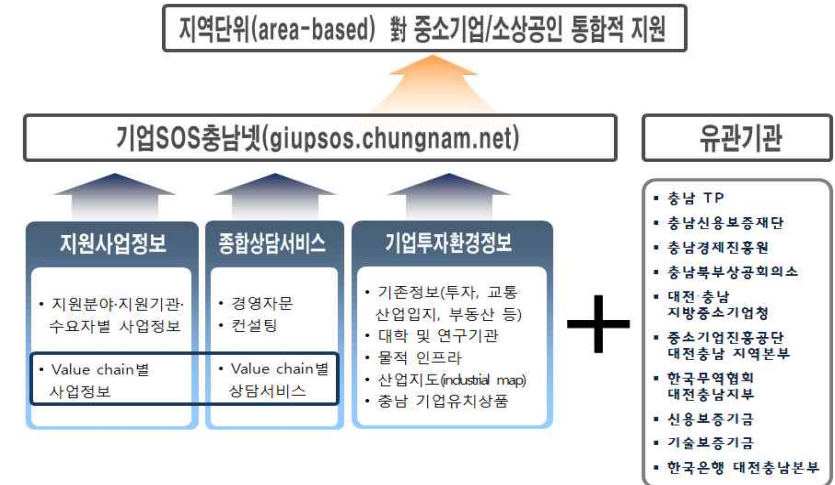
- 또한 각 시도의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의 집행점검 및 철저한 정책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에 따른 예산지원 차등화를 명문화하여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하여 정책 품질제고를 도모해야 함

[6] 중소기업 지원방식 개편

- 지방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지원의 경우, 향후 2~3년간의 경영목표를 제시하는 경영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경영계획서의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여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동시에 전문성 있는 경영지도나 기술지도와 자금지원을 연계시킴
- 본격적인 자금지원과 더불어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정책의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다만 경영컨설팅턴트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수준이 미달하는 경영컨설팅턴트는 수요자 평가를 통해 해당사업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이 있음
- 인력과 기술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과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연계 강화를 통해 양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임
- 중소기업 인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른 지원사업의 연계성 저하로 중소기업의 참여부진 및 인적자원투자가 부진한 상황임
-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에 인력 현황 및 인적자원투자 여부를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산입하여 중소기업 인력문제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인력을 구비한 중소기업으로 중심으로 연구개발 지원대상을 선정하도록 함
-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본래 용도와 다르게 개인적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자금지원방식을 개편하고, 일부 인건비를 제외하고 경상경비의 경우 중소기업통합지원기구를 통해 직접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구매전용카드제 도입 등을 통해 지원자금의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토록 해야 할 것임

3. 지역단위 중소기업 지원포털 시스템 구축방안

[1] 비전체계



[그림 5-1] 중소기업 지원의 비전체계

[2] 기본방향

■ 단계별 對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시스템 구축

- 제 1단계 : 정보포털(information portal) 구축
 - 지원사업정보를 체계화한 포털로서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유관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DB화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제 2단계 : 협업포털(collaboration portal) 구축
 - 유관기관과의 다양한 업무연계를 위해 필요한 협업시스템 구축
- 제 3단계 : 전문가포털(expertise portal) 구축
 - 다양한 관련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전문적인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 제 4단계 : 지식포털(knowledge portal) 구축
 - 기업지원 포털의 궁극적 지향점(단계별 포털기능을 통합한 전문화·개인화된 시스템 구축)

3. 지역경제 종합지원 포털 시스템(충남형 Business Link) 구축방안⁵⁾

① 개 요

■ 목 적

- 지역단위(area-based) 지원사업정보 및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시스템 구축
 - 수요자 중심의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이용편의성 제고
 - 정책수혜 대상 확대 및 민원서비스의 온라인 처리를 통한 비용절감

■ 서비스 대상

-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국내·외 투자기업, 기타 등

■ 주요 기능

- 중소기업/소상공인/여성·장애인 지원사업 정보안내 및 향후 on-line신청까지 일괄 서비스 제공
- 정책수요자들의 민원(애로)해소, 경영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 국내의 기업투자환경(기업경영환경, 정주환경, 산업인프라, 고용환경, 산업입지, 물적 인프라, 부동산, 충남기업유치상품, 기타) 관련정보 제공

■ 세부 내용

- (on-line) 충남형 Business Link 구축
 - 지역단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단일창구(single window)에서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온라인 처리시스템」 구축·운영
 - 도내 투자기업들에 대한 기업투자정보 제공
- (off-line) 충남경제진흥원의 기업애로 및 민원서비스 기능강화
 - 기존 중소기업경영지원단의 맞춤형 컨설팅 기능 강화
 - 기존 Biz 콜센터의 기업애로 및 민원서비스 기능 보강

② 구축방안

5) 온라인 포털구축 시 고려해야할 기술적 사항은 관련 전문가 또는 업체의 별도 자문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논의는 제외기로 함.

■ 기업 SOS 충남넷(giupsos.chungnam.net)의 지역단위(area-based) 기업/소상공인 지원 포털로 격상

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개발

- 현재, 「기업 SOS 충남넷」 상에서는 기본적인 정보만을 단방향으로 단순하게 제공하거나 지원기관과 이용자와의 교류 및 이용자간 교류제공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책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없는 실정
- 정책수요자들과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양방향성 매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치는데서 탈피하여 이용자들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함
- 따라서 「기업 SOS 충남넷」 이용자가 느낀 불편 또는 개선사항을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이용자란(게시판)을 마련
- 아울러 지원기관과 이용자와의 교류 및 이용자간의 교류제공을 위해 커뮤니티(전문가포럼, 지식포럼 등)포럼 운영

② 정보 및 서비스 공급체계 개편

- 지원사업정보는 지원분야별, 지원기관별, 수요자별로 정보검색이 가능하도록 개편(Biz info의 정보체계 벤치마킹)
 - 지원분야 : 기존 기업지원정보와 기업종합지원 메뉴상에서 제공되는 지원사업정보를 통합·운영하되, Biz-info상에서 제공되지 않는 충남도 및 지역유관기관사업을 중심으로 분야별(자금/보증, 판로/수출, 인력, 창업/벤처, 특허/인증, 기술, 공공구매, 세제, 소상공인/전통시장, 여성/장애인/기타)로 정보제공(기존 타 시·도 사업정보 배제)
 - 지원기관 : 충남도, 지역단위 유관기관별(11개 유관기관 + @)로 지원사업정보 제공
 - 수요자 :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성/장애인별로 지원사업정보 제공
- 기업 투자환경 정보의 통합·운영
 - 기존 도 홈페이지상에서 분산·제공되는 투자, 산업입지, 취업/채용, 지리, 부동산정보를 기업투자환경정보 메뉴하에서 통합·제공하되, 이들 정보 제공을 위해 링크된 기존 사이트는 유지

* 투자정보 : 인베스트 코리아(<http://www.investkorea.org/>)

- * 산업입지정보 : 국토해양부 산업입지 정보센터(<http://www.industryland.or.kr/>)
- * 취업/채용정보 : 충남일자리종합센터(<http://www.cnwork.or.kr/>),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센터(<http://www.newjob.or.kr/>), 고용부워크넷(<http://www.work.go.kr/>)
- * 부동산정보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or.kr/>), 충청남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chungnam.net/>)

- 이외에 다음의 기업투자환경 정보를 추가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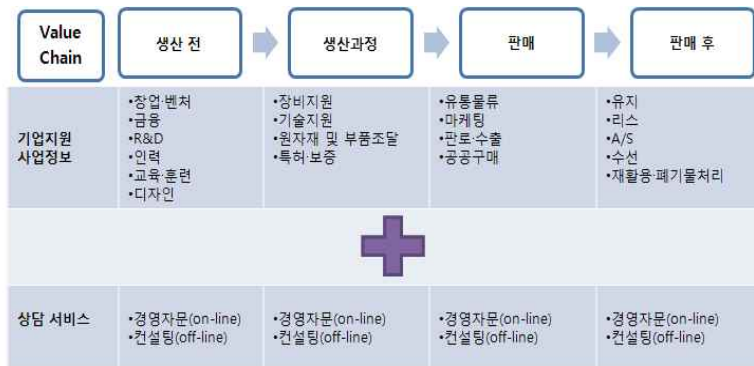
- * R&D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정보
- * 항만, 교통, 유통/물류, 유틸리티(용수, 전력, 폐수, 통신 등) 관련 물적 인프라 정보
- * 기업투자 인센티브(행·재정적 지원사항) 정보
- * 웹기반 충청남도 산업지도(industrial map) 작성·제공
- * 충남 기업유치 상품(프로그램) 정보(현재, 추진 중)

• 상담서비스 지원분야 일원화

- 경영자문과 컨설팅 두 사업에서 중복되는 지원분야는 일원화하되, 컨설팅사업은 현장 중심의 지원분야로 재편하고, 경영자문은 on-line상에서 지원 가능한 분야로 재편

• 지원사업정보와 상담서비스 통합·운영

- 기업 가치사슬(value chain)별 상담서비스 제공 + 기업 가치사슬(value chain)별 지원사업정보 제공



[그림 5-2] 기업 가치사슬별 지원사업정보와 상담서비스 제공

③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디자인과 정보구조의 개선

- 3 depth 범위내에서 수요자가 얻고자 하는 정보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디자인
- 지원분야의 각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구조(Information Architecture, IA)를 설계하되, 이용자가 지원사업정보를 찾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검색 시스템 도입
 - 지원사업정보를 지원사업명, 지원분야, 지원기간 등의 조건으로 상색검색 서비스 제공(Biz info 상색검색 서비스 벤치마킹 要)

③ 유관기관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 충남형 기업지원 포털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원유관기관들의 협조와 적극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

- 지역단위(area-based) 기업지원 포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관기관들이 파트너로써 참여하게 유도함과 동시에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간 원활한 업무연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 다만, 충남형 지원포털 구축 및 이를 통한 서비스 제공여부에 대해서는 유관기관들의 자율의사에 맡기되 그 참여수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단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지원포털과 연계하는 것이 보다 유리해야 할 것임
 - 다시 말해, 현재 유관기관들의 對 기업/소상공인 서비스 제공시 겪는 제도적·시스템적·기술적 애로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충남형 지원포털 구축시 반영해야 그 참여수준을 높일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지역유관기관간 파트너십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협의조정기구인(가칭) 「충남형 기업지원 포털 운영위원회」를 구성
 - 동 위원회는 각 유관기관 담당자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단순한 조언 또는 자문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원포털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의 권한과 위상을 부여
- 끝으로 지역단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있어 「충남형 기업지원 포털」이 단일관문(single gateway)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유관기관과의 협약사항은 다음과 같음

- 對 중소기업/소상공인 one-stop 지원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 tip

- ① 협약기관별 포털 담당자 지정, 지원사업정보 DB화 및 관리, 그리고 관련 업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
- ② 지원사업정보 및 DB자료의 지원기관간 네트워크화에 대한 사항
- ③ 「기업SOS충남넷」 과 유관기관 사이트간 동기화(synchronization)에 대한 사항 등

【참고문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성공 징검다리」, 2011
지경부, 「영국 Business Link 제도의 정책적 시사점」, 2008.5.
충남발전연구원,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통합적 추진방안」 2009.
충청남도, 「2011년도 중소기업지원시책 안내」, 2011.

【인터넷 자료】

고용부워크넷(<http://www.work.go.kr/>)
국토해양부 산업입지 정보센터(<http://www.industryland.or.kr/>)
기업SOS충남넷(<http://giupsos.chungnam.net/>)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센터(<http://www.newjob.or.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or.kr/>)
비즈인포(<http://link.bizinfo.go.kr/>)
인베스트 코리아(<http://www.investkorea.org/>)
충남도(<http://www.chungnam.net/>)
충남일자리종합센터(<http://www.cnwork.or.kr/>)
충청남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chungnam.net/>)